엔지니어링 육성 발벗고 나선다!

정부, 중소기업에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 엔지니어링단지 조성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인턴제도가 실시된다.

또 엔지니어링기업의 연구개발(R&D) 공동참여와 외국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엔지니어링 지식집약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시한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9월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주력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가 엔지니어링기업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이공계 석사 학위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200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65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2006년 상반기부터 연수생 100명에 대해 5개월간 현장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엔지니어링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말부터 엔지니어링 관련 은퇴 고급 기술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화와 기술인력 풀제를 운용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지식집약단지는 1만5000평 내외로 조성해 엔지니어링 R&D 허브 및 국제교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렴한 임대료, 공동 기반시설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지식집약단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모든 부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 계약을 입찰할 때 교육시행 부처에 관계없이 비슷한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70% 수준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기술력을 2015년까지 90%로 높이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4년 0.7%에서 5.0%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2004년 15만명에 불과했던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기술인력 고용규모를 2015년에는 25만명으로 늘리고 R&D투자 비율도 0.17%에서 0.3%로 높일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9/05>